생태민주주의와 대안적 문화

우리 사회에 환경운동이 싹튼 지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환경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화를 더욱 진전시키면서 동시에 생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환경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태민주주의나 녹색정치를 발전시키기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물질주의와 개발을 지지하는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11월 생태사회포럼에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은 무엇이고 생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적 문화와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협동과 우애, 자연에 대한 사랑에서 찾는 대안적 행복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날짜와 시간 : 2009년 11월 6일(금) 18:00 ~ 22:00

○ 내용
-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가? 왜 불행한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 다른 행복, 다른 가치가 싹트고 있는가?
- 생태 민주주의 혹은 대안적 사회를 위해 어떤 문화와 가치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 환경운동단체는 스스로 어떤 문화적 전환을 해야 하는가?

○ 사회: 구도완 박사

○ 발제
조승헌: 생태민주주의와 한국 문화

○ 토론
이보은(여성환경연대): 소비문화 사회에서 '느림 문화'에 대한 욕구
김민정(조선대): 자유주의 시장문화와 생태민주주의
박혜영(인하대): 촛불과 생태민주주의를 향한 희망
김창민(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은 한국사회 문화를 바꾸고 있는가
송태수(노동행정연수원): 탈물질주의 가치와 녹색정치

○ 발표자료
생태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닌 결과이다: 조승헌 ····· 2
자유주의 시장문화와 생태민주주의: 김민정 ····· 17
속도사회 대한민국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 이보은 ····· 19
환경운동은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가? : 김창민 ····· 23

생태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닌 결과이다[1)]

조 승 헌(행복경제연구소 소장)

1.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게?

가. 대한민국에 공공성은 있는가?

공공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이라고 정의된다(네이버 국어사전). 최근 공공성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개념의 인플레이션"[2)]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공식적 개념 정리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송대희, 2009; 조한상, 2009)

공공성의 속성 중 하나인 공개성은 특정인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진실' 이나 '올바름'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띄고 있다. 특정인이 아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공공복리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개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적 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여건이 따라 붙어야 한다(조한상). 앞으로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소통되고 조율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점차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공공성이 결핍되면 사회갈등, 양극화, 사회적 배제, 물질주의가 부각된다. 경쟁과 효율성이 강조된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가 더욱 힘들어진다. 환경과 같은 장기적이고 공공적인 것은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우선 희생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한국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회현상이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있어도 국가단위의 사회갈등 처리능력에 따라 경제악재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요새 같은 세계적 경제 불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 사람이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돈을 가지고 사회문제, 사람의 관계를 풀어낼 수 있다. 하지만 돈이 궁한 지금에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돈이 적을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법이다. 부족한 돈의 역할을 마음을 나누어 보충하는 것, 물질적 궁핍을 이겨내는 삶의 지혜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치가나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돈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줄 수 있는 사상가일 것이다.

한국에서 공공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을 나는 1998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미숙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여기에 기본적인 생존마저 국가의 역할보다 개인능력의 문제로 몰고 가

1) 다음 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 조승헌, 24시간 가동되는 한국사회_우리들은 왜 먹을수록 배고파하는가? >속도사회와 유방암> 토론회, 여성환경연대/김상희 의원실. 2009.10.26.

2) "개념의 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그 의미가 익숙한 것 같은 용어가 실제로는 불명확하게 이해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본래의 또는 잠재된 가치까지 상실되는 현상이다. 민주주의나 인권이라는 용어를 진지한 고찰이 없이 사용하다 보면 종종 반민주적, 반인권적 상황에서도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공공성의 의미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민, 공공복리, 공개성과 의사소통으로 축약할 수 있다.

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단순, 조급, 몰입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니, 단기간에 돈이 풀리고 효과가 있을 법한 토목 사업과 일자리 만들기에 신명을 바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돈이다. 국민들도 다를 게 없다. 아파트 평수 늘리기와 자식 등수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걸 걸고 있다. 돈, 권력, 명예만 있으면 세상만사가 형통할 것이며, 월급은 하루하루 생활비일 뿐 목돈마련을 위한 투기는 당연하고, 돈과 나의 욕심을 위해 환경, 공동체, 인권 같은 공공성을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처세술로 통하고 있다.

직선과 속도가 한국 사회를 이 만큼 자라게 한 공은 분명히 인정할 만하다. 세상살이가 돈 만은 아닌데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돈을 위하여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다. 단순, 몰입, 조급증을 해결하는데 직선이 최선의 선택이었으리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 수 있다' 는 정신은 '이것을 희생하면 저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적확한 표현이다.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다 지금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 공공성, 문화, 사람사이의 정, 자연환경 훼손 등이 경제하나만 바라보고 질주해오면서 저질렀던 부작용이었음을 부정할 수 있을까. "풍족하지 않았어도 그 때가 좋았는데..." 하는 말이 공감을 얻는 이상 돈도, 명예도, 권력도 기껏해야 우리들의 반쪽마음만 만족시킬 뿐이다.

한국인에게 돈과 자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러기 부모, 특목고, 조기유학이 가정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자랑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물질과 자식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현상은 세계적 추세인 듯하다. 최근 선진국에서도 주부들이 자식을 통한 자기실현의 정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자식에 집착하는 정도가 유별나다는 것이다.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나는 국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결국 믿을 만한 것은 피붙이 밖에 없다고 만든 제일 원인제공자는 정치다. 세상과 국가에 대한 불신의 정도와 자식에 대한 집착의 강도는 비례하는 듯하다.

1998년 외환위기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제 불황이 국민에게 주는 사회적, 역사적 교훈은 간단하다: 나라로부터 기대하지 마라, 누구도 우리를 챙겨주지 않는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공적부문, 특히 정치의 역할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걱정거리를 풀어달라고 세금을 모아 준 정치영역은 오히려 국민을 골치 아프게 하고 대한민국 최대의 민원이 되고 있다.

나. 개인은 합리적인가?

여러분은 자신이 자신의 만족을 가장 잘 알고,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만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며, 인간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토크빌의 주장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계몽사상의 자기주도(self-direction)와 관련된 이 주장(Lane, 2000)이 존중되려면 개인은 합리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활발하여 개인이 합리적 행위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행복맥락에서 합리적 경제행위를 하고 있는가? 돈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 둘은 어느 정도 비례한다. 돈과 행복이 무관한 경우는 적다. 실증 분석을 해 보면 한국의 경우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많아도 불행한 경우를 합해도 1000에 4명에 불과하다. 돈으로 행복해질 수는 있다. 로또에 당첨되어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장 많이 닥

치는 문제는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돈을 벌려면 남과 경쟁을 하거나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주 운이 좋은 경우는 쉽게 돈을 벌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행운이 당신에게 돌아올 확률만 바라보는 것은 바보짓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백만분의 일보다 작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로또 1등 같은 커다란 돈을 현실적으로 목표로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저 불편하지 않을 정도'를 바라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러려면 집을 제외하고 최소한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0억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가를.

돈은 벌기도 어렵고, 버는 과정에서 희생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돈을 잘못 쓰면 쓰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생활과 마음의 중심으로 여긴다. 이제 현실적이고 과학적이 되자. 형편과 역량을 솔직히 인정하자. 우리는 돈을 벌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된다. 하지만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다. 노력과 운이 따르는 것이 돈이 아닌가.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쫓아간다고 잡히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인정하는 세상의 이치다.

내 생각으로 돈을 벌려는 노력에서 상당부분은 과잉이다. 예를 들어 돈 벌려고 하는 노력이 100이라면 70이 넘어도 버는 돈의 양은 차이가 없다는 거다. 나머지 30은 헛수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아무 성과 없는 30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몰아 부친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 나의 무능과 사회에 대한 원망이 커진다. 돈도 못 벌고 건강 잃고, 자신감 잃고, 여름밤 가로등에 달려드는 부나방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를 궁리하는 것이 행복해 질 수 있는 현명한 처세술이다. 우리들은 돈을 버는 데 막대한 노력과 신경을 쓰지만,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하는 듯하다.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돈을 버는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도움이 될 가를 따져 보려는 노력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각자 자신만의 생활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 때문에 뭉뚱그려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돈을 벌려고 쏟는 노력과 관심의 일부(10%라고 하자)만 다른데 돌려도 마음과 생활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 10%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궁리하는 것이 어떨까.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건 동의하지만 여전히 돈에 대한 미련이 있거든, 그 10%의 시간과 여력을 마음을 다잡는데 쓰면 어떨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이 무한하지 않은데, 되지도 않을 돈 벌기에 온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돈과 조건으로 살뜰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다.

2.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가. 아파트는 넓을수록 좋은가?

아파트 평수 늘리기는 속성상 제로섬 게임이다. 절대규모가 아닌 상대적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한 비교와 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자연히 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올라간다. 인간은 남보다 우월하려는 본능이 있다. 비록 지금은 처지가 곤궁해도 나도 한 번 할 수 있다는 욕망이 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근거 없는 희망론이다. 개인과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옹호하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득권층의 입장은 당연하지만 왜 일반국민들조차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계급적 역설을 계속하고 있을까. 정치사상가이자 역사학자인 토크빌은 "그 나라 정치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기득권층의 설득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간 결과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가 물질소비를 중심으로 한 인생의미 찾기 방식의 보편화이다.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걸 인생의 목표로 하는 어른들에게 적정수준의 면적 개념은 없다. 따라서 만족보다는 불만이 들어찰 공간이 항상 클 수밖에 없다. 아파트가 가진 현실적 의미는 무시할 수 없다. 아파트라는 재화는 소비와 자산증식이라는 맥락에서 개인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 연구를 보면(김지현·조승헌, 2009; 김지현·조승헌, 2008) 대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소유가 행복에 기여하며, 아파트를 직접 사용하는데서 오는 소비적 행복기여도(0.52~0.67)가 투자가치에 따른 행복기여도(0.48~0.3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가족 행복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가족행복 측면에서 아파트 평수를 주목하는 것은 주거시설이 가족행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행복에서 가족 사이의 물리적 접촉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족끼리의 친밀도는 가족이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공간이 너무 좁으면 불편하다. 너무 넓어도 가족끼리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너무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거실의 크기도 친밀도 맥락에서 적정규모가 있다. 처음에는 거실면적과 가족분위기가 같이 좋아지 친밀도 어는 정도 지나면 면적이 늘어나도 가족사이의 관계에 차이가 없거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거실이 넓다보면 아무래도 너무떨어져 있을 공간의 크기가 커면 가능성이 늘어난다. 면적과 함께 이용정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을 가족 일인당 공간활용도라고 하자. 이것은 가족들이 일정한 시간에 주거시설을 어는 정도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족행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맥락에 충실하다면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공간활용도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일수록 바쁘다. 해외 출장이 잦고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온다. 집은 잠깐 눈 부치는 공간일 뿐이다. 강남의 남편들이 식구들과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는 정도는 주말에 한두 번 있을 뿐이다. 한번 계산해 보자. 강남의 40평,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4인 가족이 있다고 하자. 일주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아파트를 사용하는 비용은 300만 원 정도가 된다(15억 원의 10%를 연간 아파트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본 것이다). 또 다른 4인 가족이 40평이지만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비용은 100만원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실제 사용을 반영하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강남의 아버지는 간간히 잠만 자고 아이들은 자정까지 학원에 있다. 주말은 어쩌다 가족이 모였으니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다. 여름방학에는 어학연수를 하다며 아이들이 한두 달 집을 비우기도 한다. 때로는 조기 유학이라고 해서 아예 집을 떠나기도 한다.

이런 사정은 강남을 벗어나면 확 달라진다. 강남이 아닌 서울에서 4인 가족으로 4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학연수, 조기 유학, 대학이후 유학은 차이가 더 심하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일인당 공간활용도는 5배 이상 차이가 날 듯 싶다. 강남이 일급 호텔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모텔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공간활용도를 세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면 황당하고 현실성이 있냐고 당장 반박을 할 듯하다. 하지만 이와 개념이 엇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중이다. 한전에서 대가족요금제도라고 해서 자녀가 3인 이상이거나 가족이 5인 이상이면 전기세를 깎아주고 있다.

나는 여기서 주택 관련 세금 제도에 공간활용도 개념을 반영하자고 굳이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단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을 뿐이다. 아파트를 평수와 가격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지 말고 가족친밀도의 관점에서 생각하자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다. 몇몇 관련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단히 낯설어 한다. 왜 그럴까? 너무 튀는 발상이겠지 하면서도, 우리가 크고 넓고 비싼 집은 가족행복에도 무조건 좋다는 맹신에 빠져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한다. 이기심이 마구 나타날 수도 이타심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사회적 환경과 소비행위, 욕구, 가치관, 문화는 서로 주고받는다. 돈이나 물건도 예외가 아니다. 남에게 나누

어준 것이 많은 사람을 부자로 정의하고 존경하는 부족에서 서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은 그 부족이 가진 문화와 가치관 때문이다. 그들에게 행복은 소유가 아닌 베풂에서 온다.

하지만, 아파트 평수와 자식 등수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국가의 역할은 더욱 필요하다. 이런 목표를 이루려고 단순, 조급, 몰입하는 강도가 높아질수록 세금을 받는 정부의 책임은 더욱 커져야 한다. 남에 대한 배려가 떨어지고 사회적 배제가 심할수록 자식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것은 사회진화적 관점에서 인간들이 선택하는 본능적 생존방식이다. 승자독식, 패자굴종을 세상사는 지혜라고 강조하는 핵심세력의 상당수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정해 준 공공부문과 경쟁에서 이겨낸 상위 10%이다. 안타깝게, 당분간 이들이 생각을 바꿀 것 같지 않다. 왜? 지금의 제도와 여건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나.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자식은 부모의 노후행복을 위한 좋은 투자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 자식을 통하여 노후에 행복해지려는 것, 본전을 찾으면 다행이다. 이런 주장은 자식 문제에 유별나게 집착하고 있는 한국의 부모들을 꽤나 불쾌하게 만들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따지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천박하고 불경스러우며, 사회적 미덕과 미풍양속을 무시한다고 여겨지니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처신으로 취급당하기 십상이다.

나는 부모들이 자식사랑과 자식투자, 즉 사랑과 투자를 구분했으면 한다. 사랑은 이타적이다.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고 일방적이다. 서운하거나 기대를 가지는 것도 사랑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다. 공치사를 하는 건 사랑을 빙자한 자기만족에 불과하다. 투자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다.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과 관계와 계약을 맺는 것이다. 기대를 하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고 결과를 기대와 비교하는 게 당연하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하는데”라는 원망과 함께 꼭 되짚어 볼 것이 있다. 부모인 내가 자식에게 ‘사랑’이라며 해 준 것들이 자식의 삶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남용하면 몸을 해치는 독이 되는 법. 아무리 좋고 비싼 교육이래도 자식들의 수용능력과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쑤셔 넣으면서 부모들은 그것을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자식이 지금은 힘들어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결국 옳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다. 영어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다.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말을 하는 거다. 최대가 최적이 아니라는 세상의 이치를 자기 자식에게도 실천하라는 거다.

자식농사를 잘 지워 자식을 위하여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을 찾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비난하랴. 하지만 여기에 투자의 개념이 들어갈 때 자식농사는 자식사랑이 아니고 자식장사로 변질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된 부모와 자식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말이다. 이 말은 통상 좋은 취지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부모 자식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부모는 자식에 쏟은 본전을 거론한다. 사람이란 게 상황이 힘들고 서운하면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보존본능이 발동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투자한 노력과 돈은 엄밀히 따지면 부모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세대를 거쳐 이전하는 것이다. 무형의 가문 자산을 상속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물론 세대 간 이전 과정에서 더하거나 덜 한 것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대단한 희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거다.

물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세대 간 맥락으로 인정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은 긴요하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있듯이 자식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부모의 행위는 인정해 줄 만 하다. 하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은 대대손손 물려주라는 것이지 어는 세대가 탕진하라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행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윤리적 의무를

실천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로 비난 받을 만하다. 자식투자가 아닌 자식사랑이라면 결과에 대하여 초연해야 한다. 희생을 했으니 결과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조건부 사랑이자 투자일 뿐이다. 자식과 부모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비유한다면 우리들은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순수한 이타적 행위보다 결과와 이익에 더 마음이 가 있는 듯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자식이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자식에게 이것저것 시켜놓고 부모의 희생을 몰라주는 자식에 대하여 서운해 한다는 거다. 부모들이 말하는 자식사랑을 들여다보면 자식투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경우가 많다. 무리하게 투자하면 실패한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투자자 간에 경쟁은 필연이다. 대박이날 확률보다는 원금마저 까먹을 확률이 더 높다. 때로는 집안이 온통 뒤집어 질 수도 있다. 부모가 자식을 투자대상으로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동양과 서양,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식사랑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나라와 시기에 따라 다양하다. 최소한 한국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초등학교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자식교육에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은 적이 있었을까. 하기야, 딴엔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 봤자 이미 늦었고, 대학입시가 결정되는 시점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 이러니 교육에 쏠리는 돈과 노력이 눈덩이 불어나듯 점점 더 심해지는 거다. 고등학교 때 다니는 학원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다면 재산보다 공부를 시키라고 했다. 돈은 써버리면 그만이지만 공부는 평생 머릿속에 남는다는 격언을 신봉했다. 하지만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국영수와 기능중심의 교육이 휩쓸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부모들도 딱하다. 자식에 대하여 인간교육은 안 시키면서 어떻게 자식으로부터 부모대접과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기대하는지. 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기준은 오로지 등수와 입학시험이다. 학교와 학원이 국영수에 빠져있으니 부모가 인간성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는 더욱 없으며, 집에 와서는 좀 쉬어야 하는 것이 부모들의 삶이다.

대한민국은 사교육이 판을 치고 있다. 연간 20조 원대에 달하는 거대한 돈이 쏟아 부어진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교육이란 괴물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공교육은 거대 공룡 사교육의 그림자에 가려 초라하기만 하다. 사교육 효과가 과학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 하지만,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떨어뜨려 대학이후의 학습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는 학계에서 거의 수긍하는 분위기다.

자식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주장이 있다. 나아가, 자식을 억지로라도 공부시키는 현실적 이유로 주목받는 것이 자식평생부양론이다. 대학을 나와도 변변한 일자리 얻기가 힘든 판국이니 잘못하다가 어른이 된 자식을 부모가 먹여 살려야 할 판이다. 이런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식의 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크다.

논리 자체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현실에서 실행될 때는 좀 더 좋은 교육과 조건과 연계되는 속성이 있다. 부모들이 말하는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게 자기 자식에게 적용될 때는 평균 이상의 수준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들의 현재 생활과 관련이 있다. 잘살고 힘 있는 집안에서 자식에게 해 주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은 대기업 정규직, 아파트, 자가용이다.

노후를 자식에 기대겠다는 부모들은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심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요새 부모들이 노후문제에서 자식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상당 부분 접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포기하는 바탕에는 자식이 제 한 가족 살기에도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 아니냐는 비관

론이 깔려있다. 노후독립론이다.

돈과 효용의 관점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파악한 대표적 학자가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대학의 베커 교수(Gary Stanley Becker)이다. 인적자본투자이론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모가 가진 조건과 결부시키고 있다. 부모가 자식에 신경을 쓰는 것을 자녀의 미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교육투자로 보는 것이다. 투자의 내용은 부모가 가진 돈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돈이 많은 부모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지 않다. 하지만 가난한 부모는 학원비를 내면 일반 생활비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여기서 부모의 부담은 부모가 자식에 돈을 쓰는 것을 통하여 얻는 만족감의 정도, 경제학 용어로 효용과 연계된다. 결국 돈에 여유가 있는 부모는 학원비가 나가도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줄일 필요가 없으니까 자식을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부모의 효용에 도움이 되지만 가난한 부모는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한국의 부모들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식포토폴리오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식 교육을 위한 부모의 헌신과 노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미국에서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몰려드는 교포들, 기러기 부모, 국내는 이보다 더 하다. 대치동이 그 상징이다. 자식을 좀 더 좋은 학원에 보내서 또래 아이들을 따돌리려는 욕심은 부모의 체면도 문제 되지 않는다. 어는 정도 사는 집의 어머니가 파출부를 하거나 아버지가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 것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식사랑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식이 아주 잠재적 성취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합리화 될 수 있다.

교육 관점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노력은 적정수준으로 조절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현재 한국 부모들의 생각을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다. 자식사랑은 크고 많을수록 좋고 아름다운 것. 자식사랑의 으뜸은 교육이며 자식교육의 개념은 돈을 쓰는 것. 즉 자식사랑의 크기는 자식을 위해 쓰는 돈의 규모로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 부모가 가진 자식사랑, 아니 자식투자 방정식이다. 자식투자의 크기가 성적과 비례하고, 성적은 투자회수액과 비례하기 때문에 자식을 통한 투자에 몰입하는 것이 합리적 행위라는 거다. 이러니 부모가 자식의 교육비를 위하여 온갖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3. 정부와 사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가. 개인행복도 시스템이 받쳐주어야 한다

행복은 궁극적으로 마음이고 주관적 느낌이다. 입맛과 취향을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되듯이 행복도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는 주장도 이런 논리를 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절반이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사랑, 소득, 종교, 가족, 건강, 문화, 정치, 환경 같은 후천적인 노력과 외부 조건에 달려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건강해도 치안이 불안하고 사회분위가 흉흉하다면 마음이 편할 리 없다. 더욱이 치안이나 환경과 같은 공공재는 개인 혼자 대처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속성이 있다. 가장 사유재적 성격이 강해 보이는 행복이 공공재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이다. 국가가 나서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이런 이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미국의 독립선언문 중에서
>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2009년 신입사원 정기 공채를 발표한 KBS가 아나운서 지원자의 카메라 테스트 의상을 흰색 면티셔츠에 청바지로 제한했다고 한다. 한 사람 당 30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카메라 테스트에서 지원자들이 의상과 미용에 지나치게 고비용을 들이는 것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만약 트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KBS를 상대로 옷 입는 자유를 침해했다하여 법적 다툼을 벌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웃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공익이라는 논리보다 더 위세적인 것이 법감정이다.

그런 면에서 주5일제 근무도 비슷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런 조항을 들어 내가 내 돈 벌려고 일하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말리냐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딴죽을 걸지 못하는 것도 법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 보다 더 무서운 정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한다. 10대 경제대국, G20 회의를 개최한다고 자랑을 하는 대한민국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세금 내고, 군대 갔다 오고, 법을 지키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뿌듯해 하면 뭐하나, 쓸 만한 집들은 일부가 독차지 하고 서민들이 집 한 채 사려면 몇 십 년이 걸리는데. 머리와 상관없이 단지 부모님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식들은 외고를 못 가고 지방대학으로 가야하고 천만원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자보다 실업자가 더 많은 세상에서 저출산을 걱정하고 희망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나. 양적으로 성장하지만 질적으로 악화하는 한국 사회

객관적 수치로 보면 대한민국은 살기에 괜찮은 사회다. 10대 경제대국,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근접, 평균수명이 80살에 육박, 교육수준이 높고,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다. 그런 덕에 유엔개발계획이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에서 우리는 180여 개국 중에서 계속 20위권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왜 지속가능성 지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이고 행복지수는 중하위에 머물러 있을까? 한국의 겉과 속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표1을 보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큰 추세로 보면 실질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과반수가 불만이다. 수명도 마찬가지다. 양적 수명은 늘어나지만 살아 있는 동안 느끼는 만족도인 행복수명은 떨어지고 있다. 행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돈의 크기를 비교하는 소득의 행복효율화지수도 1990년에 21.3이었지만 2006년에는 14.9로 급속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행복과 중요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혼율은 증가하다가 2003년을 정점으로 약간 감소하지만 1990년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결혼과 관련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특이한 사항은 이혼사유 중에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비중이 이전의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가정만족도 또한 전에 비하여 뚝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지칭한다. 1982년에 2.42명이었으나 2000년 들어 절반으로 떨어져서 최하위 수준이 된 것은 어쩌면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된 정해진 수순이다.

한국사회가 좋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대답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유형이 있다.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것은 국민들이 일은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류. 국민들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많이 회사와 조직을 위하여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 일단 경제가 성장하고 돈이 생기면 저절로 대한민국은 좋아질 것이라고 웅변하는 무리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즐거움이고 희망일 것이다. 무수한 국민들이 빚어 놓은 떡을 가져다 먹는 것은 그들이고 국민들은 떡고물로 만족하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은 차마 말을 하기가 그렇다(표 2 참조).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선진 국가들은 물론 일인당국민소득이 한국보다 3~4배 많다. 하지만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선진국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 돈 걱정 없는 교육, 화려하지 않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집, 아파도 돈 걱정 없는 의료시스템, 쾌적한 환경,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나는 이런 것들을 사회공유자본이라고 부른다)에 정부와 사회가 그 돈을 가져다가 쓴 것이다. 이렇게 되니 국민들은 돈 가지고 차별적 우월성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이 구조적으로 차단된 것이다. 한국 같이 돈 가지고 아파트 평수 가지고 무한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돈을 이용한 경쟁적 소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것을 부추기는 정부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표1> 한국의 양적지표와 질적 지표들의 변화 추세

	실질 소득[1]	소득 만족도	평균 수명[1]	행복 지수	소득의 행복 효율 화지수	행복 수명[1]	조이혼율[1]	합계 출산율	경제문제 이혼 사유[1]	가정 만족도[1]
	만원	%	세	%		년	1000명당	명	%	%
1982	438	46.3[2]	-	-	-	-	0.7	2.42	3.7	-
1990	835	52.7[2]	71.3	62.1[2]	21.3	44.3	1.1	1.59	2.0	67.4
1996	1284	52.1[2]	74.0	66.6[2]	21.4	49.2	1.7	1.58	3.5	60.7[5]
2001	1416	53.2[2]	76.5	65.2[2]	20.7	49.9	2.8	1.30	11.6	-
2003	1548	37.6[1]	77.4	47.3[1]	14.8	36.6	3.5	1.19	16.4	-
2006	1756	43.2[3]	78.6[4]	48.5[1]	14.9	38.1	2.6	1.13	14.6	48.7

자료원: 1 통계청 2 World Values Surveys 3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 통계청 2005년 통계 5 통계청 1998년 통계

<표 2> Size, concentration and effectiveness of taxes and transfers in reducing inequality *Mid-2000s*

	Public cash transfers			Household taxes		
	As a percentage of household disposable income	Concentration coefficients	Inequality reduction	As a percentage of household disposable income	Concentration coefficients	Inequality reduction
Australia	14.3	-0.400	0.097	23.4	0.533	0.045
Austria	36.6	0.157	0.052	33.4	0.381	0.029

Belgium	30.5	-0.120	0.119	38.3	0.398	0.037
Canada	13.6	-0.152	0.060	25.8	0.492	0.037
Czech Republic	24.3	-0.154	0.114	21.6	0.471	0.037
Denmark	25.6	-0.316	0.118	52.5	0.349	0.042
Finland	14.4	-0.219	0.065	30.1	0.428	0.038
France	32.9	0.136	0.056	26.0	0.374	0.020
Germany	28.2	0.013	0.086	35.5	0.468	0.046
Ireland	17.7	-0.214	0.100	19.4	0.570	0.041
Italy	29.2	0.135	0.073	30.2	0.546	0.047
Japan	19.7	0.010	0.048	19.7	0.378	0.003
Korea	**3.6**	**-0.012**	**0.011**	**8.0**	**0.380**	**0.005**
Luxembourg	30.6	0.085	0.066	23.8	0.420	0.032
Netherlands	17.1	-0.198	0.080	24.7	0.471	0.041
New Zealand	13.0	-0.345	0.080	29.0	0.498	0.038
Norway	21.7	-0.183	0.093	33.2	0.376	0.027
Slovak Republic	26.0	-0.056	0.094	20.0	0.422	0.028
Sweden	32.7	-0.145	0.121	43.2	0.337	0.032
Switzerland	16.0	-0.170	0.057	36.0	0.223	-0.012
United Kingdom	14.5	-0.275	0.085	24.1	0.533	0.039
United States	9.4	-0.089	0.041	25.6	0.586	0.044
OECD average	21.4	-0.114	0.078	28.3	0.438	0.032

Note: Data refer to the income earned in 2004 in all countries except Australia and New Zealand (2003/04); Hungary and the United Kingdom (2004/05); Switzerland (2004-2005); Canada, Denmark,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2005); and Korea (2006).

Source: OECD, 2009.

다.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와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사회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와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사회에 대한 선호를 물으면 전자가 많이 나온다. 혹자는 전자를 선호하는 이유로 경제적 약자를 거론한다. 돈이 돌아가야지 못사는 사람들에게 떡고물이라고 갈 것이 아니냐는 거다. 진보진영마저 경제성장논리를 수용하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는 상당히 배고파한다는 생각이 깊게 든다. 이 주제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은 한국사회가 아무 의심 없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다.

한국처럼 사람, 시설, 자연환경이 이용되는 강도가 높은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빨라야 하는 강박관념, 많이 벌고 많이 써야 좋은 것이라는 문화, 여유가 없는 삶. 이런 것들이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생태적 관점에서는 독이다. 인간과 자연은 소진된다. 한국이 24시간 돌아가는 속도사회의 첨병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전국이 공사판이고, 24시간 술을 사먹을 수 있으며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은 만여 개에 달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 청소년 공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세계수준이지만 이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긴 학습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다(이하 김기헌, 2009). 15~24세의 학습시간을 보자: 한국 4시간 55분, 미국 2시간 50분, 영국 50분,

스웨덴 1시간 33분, 그리고 우리가 교육선진국으로 부러워하는 핀란드는 1시간 48분에 머문다. 자연스럽게 같은 나이대의 수면시간, 운동시간, 자원봉사활동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다. 성인들 공부시간은 최저수준이다.

이 모든 활동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마 한국사회시스템이 다른 사회정도의 활동을 한다면 아마 국민총생산의 1/3은 줄어들 것이다. 한국사회가 이렇게 악착스럽게 일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소비를 위한 것이다. 한국인이 소비를 좋아하고 특히 소비의 질을 좋아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아마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명품소비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속하지 않을까 싶다. 어찌 보면 한국인은 소비라는 우상에 놀아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소비는 인간의 능력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전까지 과소비는 상대적 비교의 문제로 설명이 충분했지만 점차 절대적 소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 상품의 질과 광고의 기술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절대적으로 유혹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돈에 대한 필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생산량을 늘리려면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듯, 돈에 대한 필요가 커지는 사회분위기는 경제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생산성 향상과 경제활동의 양적 증가를 생각할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의 절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물질소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들도 여가대신 노동을 택했다. 많은 시간을 일할수록 좀 더 많은 소비재를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린다 나자레스, 2008)’. 돈을 벌 능력 있는 사람이 일부러 일을 적게 하고 노는 것(이것을 downshifting이라고 한다)을 별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분위기이다.

라. 민주주의가 없는 경제성장은 독이다

경제성장의 규모만을 생각한다면 시장은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 경제 성장은 초기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경제만 잘 돌아간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경제적 기반에 자율성, 다양성이 가미될 때 성숙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없는 시장주의는 공공성, 자율성,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경쟁과 물질중심주의 사회가 되기 십상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사회에서 먹고살기 힘들지만 신기하게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경제성장 자체를 탓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란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성장과정에서 환경오염 같은 부작용이 없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결한다면 성장을 탓할 사람은 극히 없을 것이다. 약 300년 정도 지나오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성장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분명 있다. 하지만 자본의 축적과 민주주의가 반드시 사이좋게 궤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 자본주의는 세상을 돈 중심으로 보는 거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순간, 돈에 딸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받아들인 셈이 된다. 자본주의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적용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이런 구조에 결합하여 물질성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성장에 따라 자본주의는 더욱 튼실하게 됐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든, 경제성장이든, 돈이든, 궁극적으로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수단이다. 그런데 자본축적이 인간의 고유가치도 높였느냐하면 즉시 그렇다, 라는 답변을 하기 힘들어진다. 세상에서 돈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인간가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인간가치가 평가절하 됨에 따라 인권과 행복도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인간가치도 따라서 올라간다. 경제성장과 인간가치는 속성상 갈등의 관계이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민주주의가 끼어들면 경제성장과 인간가치가 나란히 좋아질 수 있다. 결국, 경제성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이 인간에 봉사하는 착한 수단이 될 수도 인간을 괴롭히는 무기로 변질될 수도 있다.

4. 사람의 마음과 욕망을 이해하자

우리는 적정수준 보다 최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본능과 사회적 부추김이 결합된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쟁, 효율성, 시장의 논리가 최대추구의 성향과 결합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단기적 이익추구와 장기적 이익 경시이다.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을 안고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확실성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확실성 효과(certainty effect)'라고 한다. 개인이 지속가능한 관점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나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기 힘든 이유가 이 때문이다. 사회와 국가마저 분배, 복지, 환경을 다루는 개념을 효율성과 자율성에 치우치면 지속가능성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복추구는 본능이다. 인간의 유전자적 구조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다. 개인과 가족단위에서 인간이 가진 이러한 결함에 대한 인정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능을 인정하지만 욕구를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가족과 세대 간에 대화와 학습을 하자. 부모, 자식, 가족, 돈, 행복, 욕망, 합리성, 공공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돈을 강조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는 것은 실증적으로도 알려진 사실이다(Mortimer, 1979. Lane에서 재인용). 학생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으면, 언제부턴가 부자라는 대답이 제법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아이들은 물질가치 중시형이 된다. 이들은 매사에 만족도가 낮고, 경쟁 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 조직, 사회가 어떤지 상상해 보라.

시간과 행복에 대하여 성찰해보자. 인간의 마음과 행위는 사회적으로 진화한다.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뿐 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인식적 측면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시간을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의 경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Drake et el., 2008; James, 1890/1950; Suddendorf and Corballis, 1997; Block, 1990; Gonzalez and Zimbardo, 1985). 삶의 의미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이해하려면 경제적 이해를 넘어 시간을 심리적이고 사회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사람마다 같다고 해도 시간에 대한 자율성에 따라 시간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다양해진다.

시간주권은 개인이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의 양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Scherhorn, 1995, Reisch, 2001에서 재인용). 단순히 자유로운 시간의 물리적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실업자에게 자유시간은 고통이다. 단순히 바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시간주권이 상실되니까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다. 기술과 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물리적으로 한정된 시간의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지나친 경쟁과 끝없는 인간의 욕구를 지적하며 부자의 개념에 시간주권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자를 단순히 그가 가진 돈의 규모뿐만 아니라 시간주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는 부류에게 공명을 얻고 있다.

이런 시간의 개념을 실천하며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행복의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새로운 문화

를 만드는 사람들' CC(Cultural Creatives)이다. 이들은 근대주의나 전통주의와 다른 의식과 가치관, 행동패턴을 가진 제3의 조류이다. 미국의 경우 성인 인구의 약3분의 1인 5000만 명 이상이 이 부류로 추정되고 있다 5000만CC는 성격상 정치운동이라고 하기보다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문화운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CC의 특징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 TV보다 책과 라디오를 선호한다.
- 창작과 문화 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돈을 아끼지 않으며 창작활동과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한다.
- 상품이 만들어진 내력과 처리방식을 고려하고, 정보에 근거한 구매 행위를 하며 플라스틱 제품, 모조품, 날림, 일회용품, 최첨단 패션을 부정한다.
- IT 분야에서는 남보다 늦지만 문화 분야에서는 최첨단인 경우가 많다.
- 먹을거리에 강한 관심을 보인다. 먹을거리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하고, 생각하고, 요리하고, 식당에 가는 것을 즐긴다.
- 새로 지은 집보다는 어는 정도 지난 집을 사서 자신의 스타일로 맞게 꾸민다.
- 안전하고 연비가 좋은 차를 선호한다.
-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일치하는 포괄적 건강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인 지위보다 내면의 성장과 자기실현,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만족감에 무게를 둔다. 이들이 가진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시간감각이다. 시간을 돈보다 중요시한다. 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돈과 시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와 함께 CC들은 인생을 즐긴다는 면이다. 이들은 금욕적인 것이 아니라 쾌락 지향적이다. 물질적 풍요나 소비에 근거한 현대적 방식도, 윤리나 도덕에 근거한 금욕주의나 청빈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 모두를 거부한다. 대신 자기 감성, 미의식, 센스, 호의, 감 등을 소중히 하는 자기류의 즐거움 찾기를 강조한다.

한국의 현실에서 삶의 방식, 세계관, 가치관, 사회운영방식에 생태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회적 수용성이 당분간 약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생태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 상당 부분 실현되는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생태민주주의는 건실한 공공성을 필요로 한다. 공공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생태적 세상이 가능할까? 반대로, 공공성과 합리성이 살아 있는 사회는 상당히 생태적이지 않을까?

생태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닌 결과이다. 생태사회 실현은 사회공유자본을 통하여 가능하다. 교육, 주거, 의료, 환경, 다양성에 대한 접근을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면 개인의 욕망과 합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발과 보전은 욕망의 대리전이다. 그 욕망을 꼭 개발이나 보존의 틀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인지? 개발로 나아가는 욕망의 구조와 지향점을 바꾸는 노력과 운동은 시도해 볼 가치가 없을까?

5. 참조문헌

김기헌, 2009. 행복의 조건: 청소년의 생활시간 패턴 분석을 통한 시사점. 국가인권위원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주최,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인권 현주소, 2009.9.17.

김지현·조승헌, 2009. “주택소유로 인한 행복증진에 대한 실증분석_아파트 소유의 소비적 행복과 투자적 행복.” 부동산 학보. 한국부동산학회. 제38집, pp311-319.

김지현·조승헌, 2008. “아파트 소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학보. 한국부동산학회. 제33집, pp248-261.

린다 나자레스 지음, 최성애 옮김, 2008. 레저경제학. 한국트랜드연구소.

송대희, 2009. 2.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영화, 재정포럼.

조한상, 2009.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쓰지 신이치 지음, 장석진 옮김. 2009. 행복의 경제학, 서래문집.

Block, R. A., 1990. Cognitive Models of Psychological Time. Hillsdale, NJ: Erlbaum.

Drake Lisa et al., 2008. Time Perspective and Correlates of Wellbeing, Time & Society 17; 47-61.

Gonzalez A. and Zimbardo, P. G., 1985. ''Time in Perspective: A Psychology Today 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May).

James, W., 1890/195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New York: St Martin's Press.

Robert Lane, 2000. The Loss of Happiness in Market Democracies. Yale University Press.

Jeylan T. Mortimer. 1979. Changing attitudes towards work: Highlights of the literature. New York: Pergamon for Americal Institute Studies in Productivity.

Reisch, L. A., 2001. Time and Wealth: The role of time and temporalities for 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Time & Society 10; 367-385.

Scherhorn, G., 1995. ‘□terwohlstand versus Zeitwohlstand. □ber die Unvereinbarkeit des materiellen und des immateriellen Produktivit□tsbegriffs’ in B. Biervert and M. Held (eds) Zeit in der □konomik, pp. 147-8. Frankfurt a.M.: Campus.

자유주의 시장문화와 생태민주주의

김민정(조선대 사회학 강사)

-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사회의 행복에 관한 기준은 주관적 잣대가 아니다. 주류 경제학 논리의 핵심인 효용, 주관적 만족도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객관적인 현상인 **불평등, 불의** 그 자체이다. 상대적 박탈감, 불평등은 개인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된 것이다.

-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이 악화되는 것을 내버려두어야 하는 현실, 그 자체가 인간 불행에 시작이다.
2009년 현재,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소득 지니계수는 0.359로 지표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높다. 절대 빈곤율은 11.2퍼센트로 9년 만에 10퍼센트를 넘어섰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 2분기 하위 20퍼센트가 월평균 90만 원 가량 버는 동안, 상위 20퍼센트는 그 7.29배인 6백57만여 원을 벌었다. 이처럼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 탓이 제일 크다. 실질 실업률은 13퍼센트에 이른다. 청년 취업률도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자살자의 57퍼센트(7천26명)가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발표한 자산 지니계수는 소득 지니계수의 갑절인 0.7을 넘었다. 지니계수는 0.4를 넘으면 불평등이 극심한 것으로 본다. 상위 10퍼센트가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 총액 74.8퍼센트를 독식하고 있다.

-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해결-먹고사는 문제-이 어떤 방식으로 충족되는가가 여러 다양한 욕구 충족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소비-교환 및 분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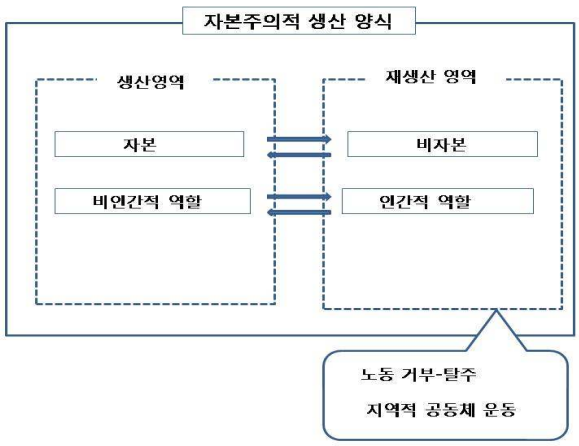
-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노동을 하면서 창조적 노동의 가능성을 박탈당한다. 그들의 노동은 소외(자기 통제력의 상실)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할 수밖에 없고 이런 노동은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러한 설명을 소외적 구조 속에서 일방적인 인간의 수동적 입장만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 구조 속에서 개별 인간은 적극적으로 소외적 과정을 인지하고 수용하게 된다.

-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시장문화 및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 직접생산자들은 모순적인 가치를 수용한다. 생산 영역에서의 노동자는 가변자본으로서의 자본(비인간)의 역할과 비생산 영역에서의 인간(비자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동일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나타나는 모순적 현상이다.

- 자본주의적 행복이 아닌 대안 사회의 행복은 생산방식의 물질적 관계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현실화되기 힘들다. 일부 공동체 활동은 현존 생산방식의 '도전'이라기보다는 주류 사회적 관계에서 약간은 고립되고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여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회피' 방식이다.

-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에 대해 고민해보자. 추구해야 할 가치로 평등, 생태, 행복, 생존 등 어떠한 논의들이 있을까? 서구의 대안사회운동 및 논의를 통해 살펴보자.
1997년 시애틀 시위를 기점으로 활발해진 반자본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이 운동에 참가한 활동가들과 지식인들과의 대화와 실천에서 우리의 가치를 모색했다. 그 결과, 그는 다



른 세계와 대안 세계를 추구하는 운동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정의, 효율성,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을 지적한다.

1. 정의: 반자본주의 운동이 호칭 가운데 하나는 세계 정의운동이다. 우리는 현재 세계의 불의와 엄청난 불평등을 끊임없이-그리고 올바르게도-비난한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 자체가 방대한 주제이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 반자본주의의 운동은 평등주의적 정의 개념에 헌신하는 듯하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예컨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자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2. 효율성: 이것은 이외로 전문관료적 가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낭비적 체제라고 비판하는 우리의 주장을 떠올려 보라. 포장·광고 따위에 자원이 낭비되고 시장 가격이 경제 과정의 진정한 비용(예컨대, 환경 파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등을 말이다. 그 함의는 모름지기 대안 사회는 가용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잘"의 의미는 (지금처럼) "가장 수익성 있는"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협력적 공생 필요성과 자연이 강요한 제약조건들과 우리의 가치들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민주주의: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비판한다. 또, 금융시장과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며 횡포를 부린다고 비판한다. 더욱이, 우리의 조직 방식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대의민주의 대 직접민주주의, 합의제 원칙 대 다수결 원칙 등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범위와 내용을 급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4. 지속가능성: 반자본주의 운동을 촉발한 주요 동기 중 하나가 환경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다. 환경 재앙은 현재 경제 체제의 흐름일 뿐 아니라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기후 변화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 온실가스 방출에서 비롯된 지구의 기온 상승에 지금 당장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추세가 그대로 계속되면 끔찍한 결과가 지구를 엄습해 그 효과가 수십 년 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정주와 운송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캘리니코스, 2009.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중의 가치 논쟁", 책갈피, pp. 79-80).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ics)를 주장한 마이클 앨버트(Michael Albert)는 **공평성과 자율관리, 다양성, 연대, 효율성** 등의 가치를 제시했다.

1. 공평성: 사람들은 얼마만큼을 어떠한 이유로 획득해야 하는가?
2. 자율관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건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
3. 다양성: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들은 다양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정돼야 하는가?
4. 연대: 사람들은 협력해야 하는가, 아니면 경쟁해야 하는가?
5. 효율성: 소기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속도사회 대한민국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여성환경연대 이보은

한국인은 원래 이렇게 빠른가 ?

-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인상기를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의 눈길을 끈 것은 느릿느릿 대로를 걸어 다니던 우리 할아버지네의 여덟팔자 걸음걸이였다. 그중에는 " 지배자인 일본 사람들은 종종걸음으로 조급하게 걸어 다니는데 오히려 한국인들은 대로한복판을 유유히 걸어 다니고 있어 과연 누가 식민지인인지 모르겠다"고 술회한 기록도 있다.
-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걷는사람 도쿄 25%, 오사카 35%, 서울66% (이어령)

24/7 쓰고 버리며 돌아가는 울트라 슈퍼 속도사회

소비자본주의를 통해 사회적 부를 자본이 다시 회수하는 전략을 위해 일상의 삶과 시간의 재조정이 이루어진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비자로 변신하여 사회적 노동을 해야 한다. (강내희)

"자본에 의한 인간 노동력의 상투적 활용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마침내 우리의 감정이나 영혼까지도 자본화해버리는가 싶더니 이제는 편하게 쉴 새벽마저 넌지시 자본의 틀 속에 포섭하려 한다. 초기 자본주의는 몸으로만 열심히 때우는 '삽질형 인간'을 원했고, 후기 자본주의는 머리까지 쥐어짜는 '지식형 인간'을 원했다. 이제 범지구 자본주의 시대는 과연 '365일' 내내 '24시간 풀가동'을 하는 '로봇형 인간'을 원하는 것인가." (강수돌)

대중문화와 마케팅의 합일로 소비주의적 라이프스타일을 유통시킴 - 대형할인마트의 할인점 패밀리, 식탐사회, 욕망과 소외의 표상 24시간 편의점 문화 (강준만)

자연의 시간 VS 근대의 시간

자연은 거대한 공공의 시계이고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인류는 다양한 시간 공동체를 형성하고 오랜 역사를 살아왔다. 그러나 근대기계문명과 함께 자연의 시간과 단절되고 노동과 일상, 인간과 자연의 황폐화를 초래해 왔다. - 직선, 단선, 분절, 인공적 시간

자본의 기획에 의해 구조화된 대량생산, 대량 소비사회는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에 의해 부양되고 있다. 더 많은 소비를 위해 더 많이 일하는 사회에서 파괴되고 있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라 인간 자신임 - 시간은 돈이다.

달과 생명의 시간 - 속도의 젠더적 성격
파시스트적인 속도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은 여성의 몸은 월경, 임신, 출산 등의 경험을 통해 자연의 속도와 달의 시간에 대한 감수성, 생명감수성에 기반한다.

속도사회 - “가속의 흥분, 추월의 쾌락”

- 이반 일리치 “ 당신이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알려주시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맞히겠습니다‘ 빠른 계급과 느린 계급으로 양분 / 한계속도를 넘어서면 다른이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는 빨라질 수 없다.

- 우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자율성은 줄고 안전을 위해 외적 법규와 교통시스템의 지시에 의존해야 한다. 속도는 수동성을 키운다. 고속으로 달리는 개인은 도로의 지배당한다.

- 속도에 굴복한 사유는 最善이 아니라 最先이기 십상이다.

- B애덤 "타임워치" 시계에 얽매인 조바심이 고혈압, 면역체계 이상, 궤양 등 질병 유발, 메이어 프리드만 등의 연구 "지나치게 잦은 데드라인은 인간의 시간 인지능력을 왜곡시키고 심장박동을 교란시켜 심장병과 죽음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말 그대로 죽음의 선이다

- 정보통신의 발달, 과로노동 가속화
"차라리 지구에서 내리고 싶다" (소니CEO 하워드 스트링거, 2000다보스포럼)

속도에 맞서는 문화저항운동
스웨덴의 열차 비상정지 사건 '속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구를 파괴하는 불필요한 악마다'
프랑스 무엠비트 - 덜빠르게
이탈리아 슬로푸드 - 속도와 관계를 성찰하는 먹을거리
오스트리아 시간감속모임
북미 자주정전운동 " 어둠의 물결"
일본 한국 캔들나이트

서구의 반문화운동의 주요이슈인 소비의 속도 늦추기
("혁명을 팝니다." 조지프 히스, 앤드류 포터)

- 유기농, 지역화폐, 페어트레이드, 윤리적 소비, 리폼과 핸드메이드, 지금여기 순간을 사기. Buy nothing day.

- 반문화운동에 대한 비판
사회변화를 개인의 의식의 변화의 문제로 환원시킨다. 그래서 소비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중독사회, 과잉노동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제도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임을 간과하고 개별소비자의 행동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물질주의의 역설- 지난 40년간 반물질 적 가치는 미국 소비 자본주의의 최고 수익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이들이 사회시스템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 / 히피-여피
소비의식을 날조된 순응의 형태로 분석하고 구별에 대한 욕구, 경쟁이 소비자본주의의 추동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래서 반문화운동이 제안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통한 반란은 새로운 지위재화를 창출 / 지위가 쿨로 대체되었지만 경쟁의 기본 구도는 그대로 인 상태

- 대안은 다시 정치다
공공성의 강화 - 광고를 사업비에서 제외, 시장에서 독점과 진입장벽 제거,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토대로 경쟁, 정보비대칭이 없이 정보의 투명한 공개, 모든외부효과 내면화(과세)를 통한 사회비용에 대한 정확한 책임

츠지 신이치의 슬로라이프 운동 (쓰지 신이치, 오이와 게이보, 이규)

사회병리현상으로 빠름의 문제 -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증후군
일본의 심각한 우울증, 자살율....모든 계층 계급
스스로를 drop out 시키는 생활 기획이 필요하다. - 고속도로에서 내려라
슬로 비즈니스, 반농반X
느린 사회를 위한 문화적 기획
- 슬로카페 네트워크, 나무늘보클럽
- 개인단위에서의 기획-슬로비즈니스/ 사회적 기획-지역만들기 / 국가 기획
-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은 논리나 구호가 아니라 **미의식**

한국의 상황

상업주의에 포획당한 슬로라이프
-슬로시티 -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만 부각됨
-DIY, 핸드메이드 - 철학거세, 또 상업화 경로
-2009년 의류업체 폴햄(polham)의 슬로라이프 캠페인 "느림의 미학, 시간의 속도를 늦추고 나를 돌아본다. 나는 누구이며 꿈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키고 실천할 것은...."
2009년 5월3-5 3일간 35억원 매출, 불황에 최대호황을 누림
--->에이션의 CEO의 주장 "컬쳐비즈를 통해 적은 소비에 가치를 얹어 만족을 더해주는 것이 불황타계 전략"
-save the penguin 골프복업체의 캠페인/Let's green plus up / Emotiona; ECO / Only one earth / 에코 앤 셀프 프렌들리

우리의 고민
체제탈출의 욕구는 커지고 있으나 다른 시공간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사람들 (문화창조자, 슬로비스, 다운시프트족)은 대부분 경제력 또는 문화자본이 있는 사람들
현실 속에서 느림이라는 말이 갖는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논의로 이끌어가자
*최근의 동향
GDP(경제성과와 사회 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의 대안적GDP설계작업 본격화
청와대의 국민행복지수 개발 천명
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서머타임 논의 - 노동시간 단축 / 조직문화 개선이 쟁점으로 부각
* 여성환경연대의 경험 - 야간 교대근무와 유방암
24시간 야간영업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 생태, 건강 등의 논의를 통한 소비자들의 설득, 서비스노동자들에게 우호적 환경조성
* 야간 연장근무를 제한하는 사회적 협약 필요
* 서머타임 논쟁의 공간을 생태적 삶과 노동현실 문제를 논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는 없을까?

-> 자원이 없는 개인이 함께 보살핌의 시공간 구축
*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일자리 만들기
* 개인이 파편화되지 않고 공동체 관계가 살아 있는 돌봄노동

* 돌봄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노동시스템 - 노동의 여성화 그러나 여성의 빈곤화로 가지 않는 구조 필요
* 예 / 성미산 돌봄공동체사업, 아토피 콜센터

-> 대안적 삶의 방식을 통한 문화 균열내기 필요
다양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개인들에 의한 사회의 재구성
* 지역공동체와 연계하는 사회창안 - 제주올레
* 반빈곤연대에 기반한 문화 기획 - 가난한 자들의 메이데이, 빈집프로젝트
* 자전거택배 - 3인공동소득 70만원, 공동텃밭운영 , 돈들지 않는 삶의 실험

느림의 표상에서 진정 중요한 건 직선으로 환원되지 않는 변칙적 리듬, 다시 말해 엇박자를 만드는 것이다.” (고미숙, 나비와 전사 중)

환경운동은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가?

김창민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오늘날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상품에 친환경적 수식어가 붙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정책과 상품을 지지하고 선호한다. 이러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자연과 친밀해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여기서 자연은 이전보다 가치 있는 소비재로 나타난 것이다. 어쩌면 여기서 환경운동이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환경운동은 한국문화의 경향은 바꾸었지만, 근본은 바꾸지 못했다. '환경', '녹색', '안전', '건강' 등의 씨를 뿌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환경운동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회원과 조직의 양적 팽창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지위도 확보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환경운동도 그들의 상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속도와 규모 원리로 성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환경운동은 새만금, 동강댐 운동 등을 거쳐 가치의 전환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체화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이슈를 만들어 언론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행정에 접근해 정책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빠르고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와 불친절한 언론의 반격으로 환경운동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잃어버린 세월의 시대가 환경운동에도 다가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도 무척이나 어려운 듯하다. 먼저 체계영역에서 생활세계로 내려오려니 무척이나 낯설고 어색하다. 그 결과 시민들은 2000년대를 사는데, 1990년대 방식이 통하지 않는 환경운동은 1980년대 방식으로 회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경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사실 속도와 소비에 의존하는 언론은 깊이 있는 정보를 주지 못한다. 환경운동이 아무리 생태적 이슈를 던지더라도 시민들은 그것을 체화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 중심의 소통으로 환경운동은 치고 빠지기식 전략에 능수능란해진 듯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많은 뉴스의 홍수더미에서 환경뉴스를 가슴에 남긴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듯하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 또는 환경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중앙집권의 역사가 깊고 시민사회의 뿌리가 얕다. 그레고리 헨더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정치는 중앙권력이라는 단극자장으로 소용돌이치는 대결의 장이다. 4.19, 6.10 등의 민주적 기회가 성공하는 것 갔다가도 좌절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시민들과 호흡하지 못했던 민주화세력들은 이러한 기회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없었다. 어쩌면 환경운동세력이 새만금, 동강댐과 같은 문제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지 못한 것도 이러한 정치문화에 복제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즉 개발을 막는데 급급했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며,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촛불시위라는 디오니소스적 소용돌이 앞에서 아폴론적 환경운동은 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였던듯하다.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에게 다가가 아폴론적 태도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그들은 외면하였다. 그러나 촛불시위 역시 지속적이고 발전적이지는 못했다.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감성으로 거리로 나섰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식량안전과 식량주권문제로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운동이 촛불시위로 가능성과 한계로부터 배울 점은 바로 이것이다. 시민들을 감동시키고 시민들에게 말을 걸며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감성의 정치에 있어서 환경단체는 무척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현장을 통해 시민들을 느끼고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경인운하반대운동의 실패에서 보듯

이 여전히 환경운동은 체계의 덫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 행정적 절차 등만 따지는 환경운동은 시민들을 감동시키기 힘들다. 환경운동은 자연이 어떻게 살아 숨쉬며, 그 속에서 어떤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토리 텔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과 어떠한 생태사회를 만들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말을 걸어야 할 듯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해보고자 한다. 왜 환경단체에는 한비야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